

부록

통계법 제33조(비밀의 보호):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.

ID				
----	--	--	--	--

재산세 공동과세제도에 대한 관계 전문가·공무원 설문 조사

안녕하십니까?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서울연구원에서는 『서울시 자치구의 합리적 자원조정 방안 연구』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본 연구와 더불어 이 조사 결과는 위 연구와 관련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, 본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. 바쁘시더라도 좋은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2016년 4월

- 조사기간: 2016. 4. 11(월) ~ 2016. 5. 6(금)
- 연구기관: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

※ 연구개요

서울을 구성하고 있는 25개 자치구는 좁은 면적을 나누어 자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망의 확장, 교육환경의 개선, 유통체계의 정비, 주거 공간의 조성 등을 추진 시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정학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.

서울이라는 공동 울타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주거 지역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, 비슷한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함.

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그리고 자치구 상호 간 자원배분의 실태를 분석하고 현 제도의 한계와 더 나은 제도 시행을 위한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.

1.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운영에 찬성하십니까? ()

- 1) 예(1-1 문항으로) 2) 아니오(1-2 문항으로)

1-1. 찬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

- 1)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해소
- 2) 지역 실정을 반영한 특성화된 행정서비스 제공
- 3) 서울이라는 지역공동체 전체 차원의 공동발전
- 4) 강남북 간 재산세 수입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자치구 간 균형 발전 도모
- 5) 기타()

1-2.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

- 1) 제도의 비합리성으로 인한 자치구 간 갈등 초래
- 2) 자치구의 재정책충에 큰 도움이 안 됨
- 3) 자치구 간 재정 격차 해소의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음
- 4) 지방자치의 원칙에 위배
- 5) 기타()

2.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자치구 재정력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()

①	②	③	④	⑤
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.	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.	보통이다.	도움이 되는 편이다.	매우 도움이 된다.

2-1. 도움이 되는 편(④, ⑤번 응답)이라고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()

- 1) 자치구의 주요 자체재원인 재산세수의 배분을 통해 자치구 간 재산세 세입격차가 크게 완화되었기 때문
- 2) 재산세라는 실질적인 재원이전을 통해 자치구의 가용재원이 증가하였으므로
- 3) 향후 재산세의 과표 현실화에 따라 신장성이 제고됨으로써 자치구 재정책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
- 4) 기타()

2-2.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(①, ②번 응답)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()

- 1) 특별히 재정력 격차가 해소되는 부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
- 2) 오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재산세수가 향후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
- 3) 국세와 지방세 간, 광역과 기초 간 세목 조정을 통해 재정구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
- 4) 기타()

3. 재산세 공동과세를 통한 자원배분이 기본적, 균형적 공공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?()

①	②	③	④	⑤
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	영향을 미치지 않는 편이다.	보통이다.	영향을 미치는 편이다.	매우 영향을 미친다.

3-1. 공공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(④, ⑤번 응답)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 ()

- 1) 공공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가용재원이 늘어났기 때문
- 2) 서울 전체 지역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의 성격을 갖기 때문
- 3) 부동산 가격의 영향을 받는 교육, 복지시설, 문화시설에 대한 지역적 차별화가 일정 부분 해소되기 때문
- 4) 기타()

3-2. 공공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(①, ②번 응답)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 ()

- 1) 자치구별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(강남, 강북 간 공공서비스 격차)
- 2) 본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, 재정자주도, 재정력지수와 같은 지표들이 지속해서 하락하여 공공서비스의 전체적인 저하가 예상되기 때문
- 3) 복지지출 증가로 인해 균등배분 방식으로는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
- 4) 기타()

4. 현행 제도상 50% 공동과세율의 결정근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()

- 1) 예 2) 아니오 3) 잘 모르겠다

4-1. 합당하지 않다고 응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

- 1) 제도 자체의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해 도출된 공동과세율이기 때문
2) 재산세의 다른 배분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균등배분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
3) 공동과세율 결정에 있어 자치구 간 협의가 미흡했기 때문
4) 기타()

5. 적절한 공동과세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? ()

- 1) 50% 이하 2) 51%~60% 이하 3) 61%~70% 이하 4) 71%~80% 이하
5) 81%~90% 이하 6) 91%~100% 이하 7) 100% 초과

6.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갖는 한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()

- 1) 소수의 기여자치구 발생
2) 재원배분 근거의 불명확성(현행 50% 재산세 공동과세율 산정기준)
3) 자치구 간 재원 배분의 갈등 야기
4) 지방세의 응익원칙(조세는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정부서비스의 대가라는 원칙)에 위배
5)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침해
6) 기타()

7. 재산세 공동과세의 합리적 배분기준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()

- 1) 균등배분(현행)
2) 인구배분 기준 방식
3) 재정력 기준 방식
4) 조합방식(인구 배분 방식 + 재정력 배분 방식)
5) 공동세 재원을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편입하여 운영하는 방식
6) 기타()

8.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()

- 1) 공동과세율의 상향 조정
- 2) 현행 배분 방식의 개선
- 3) 공동세 재원의 조정교부금 재원 편입 운영
- 4) 자치구의 재정력을 고려한 공동과세 제도운영
- 5) 기타()

※ 향후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운영에서의 개선사항이나 정책제언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.

♣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♣

